월/요/광/장

이미란

마리사, 홍메이, 시게꼬, 파니다시

3년 전, 중국의 푸단대학에 파견 교수로 나간 첫 학기에, 나는 한국어과 3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에게 '한국어 시청설(韓國語視聽說)'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다.

한국어로 말하고 듣는 연습을 시키는 교과였는데, 3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1년 정도 한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난 터라 자유롭게 의사 소통이 되는 반면, 이제 막 2학년이 된 학생들은 어휘가 부족하고 말이 어눌하여 마치 어린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3학년 수업에서는 '올드미스 다이어리'라는 시트콤을 학생들과 함께 보며 깔깔대다가도, 2학년 수업에 들어가서는 아직 인격 형성이 되지 않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듯, 교과서의 내용을 천천히 반복해 가며, 뭔가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려고 애쓰게 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2학년 학생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학생의 한국어를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워, 영어로 한번 말해 보라고 했더니, 술술 이야기를 풀어 놓는데, 놀랍도록 어른스러운 생각이었다. 아하, 참, 이 애들이 대학생들이지!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거기에 생각이 미쳤다. 그들은 다만 한국어 능력이 부족할 뿐인데, 나는 마치 그들이 인지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마리사, 홍메이, 시게꼬, 파니다시.

이들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한국어 고급반의 결혼이민자 여성들이다. 필리핀, 중국, 일본, 태국 등 태어난 곳은 모두 달랐지만,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이라는 낯선 삶을 공유하게 된 이들은 아직 한국말이 서툴다. 그러나 단지 한국말이 서툴 뿐인데, 다른 이로부터 아이 취급을 당하게 될 때,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고 비애감이 든다고 호소한다.

"저희 시아버지는요, 저에게 유치원생에게 말하는 것처럼 천천히 말씀하시고요, 한 번 주의를 준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아이도 아닌데, 미치겠어요."

"제가 다니는 미장원 아줌마는요, 제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오면, 이분 먼저 해드리자, 괜찮지? 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말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네, 하게 돼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너무너무 화가 나요. 저도 바쁘잖아요."

"저희 시댁 식구들은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만 상의해요. 제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를 못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족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잖아요."

"학부모회의에 가도 그래요. 자식들 일이잖아요. 무슨 일로 회의를 하는지 정말 알고 싶은데, 다른 학부모들이 끼워 주지 않아요."

마리사, 홍메이, 시게꼬, 파니다시.

우리는 이들이 지닌 지적 능력이나 감수성이 한국어를 통해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먼저 이들이 우리 공동체의 동반자이며 어엿한 성인이라는 생각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지난 주에는 '광고를 듣고 말하기'라는 단원을 공부했는데, 이들과 함께 만들어 본 공익광고의 문안을 전한다.

"우리는 아이가 아니에요. 단지 한국어가 서툴 뿐이에요. - 공정하게 대해 주세요.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정일과 학교 일에 참여하게 해 주세요."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소설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이러고도 '호남 홀대'가 아니라고…

정부의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에서 영남과 호남지역 예산이 13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따르면 2010년도 지식경제부의 신규사업 예산 중 영남에 편성된 예산은 616억원인데 비해 호남지역 예산은 4억6천만원에 불과하다. 영남에는 국정과제 5개를 포함한 8개의 사업이 편성되었지만 호남에는 경제 파급 효과와 고용 효과가 거의 없는 시설투자형 신규사업 3개만 배정됐다고 한다. 이 사업들의 총사업비를 비교하면 영남은 2조8천139억원이고 호남은 61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무려 461배의 차이다. 김 의원의 주장이 맞는다면 지경부의 내년 신규사업 예산은 노골적인 지역편중·호남 홀대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호남 홀대나 지역 편중은 없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이는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에서 나타났듯이 '눈 가리고 아옹'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 경제 규모나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호남 홀대, 영남 편중은 아주 노골적이다. 각종 인사에서도 호남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호남 출신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 몇몇 자리에 양념으로 끼워넣는 식이다. 그것도 별 영양가(?) 없는 자리일 뿐 4대 권력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자리는 영남 일색이다.

인사와 예산에서 지역 간 차별은 역대 정권에서도 있어왔다. 이는 대통령제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 어느 정부에서도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 등 지역을 갈래갈래 찢어 놓지는 않았다. 정부가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 한국은 인사·예산의 편중과 세종시와 4대강, 언론법 문제로 국론 분열은 거의 폭발 직전이다. 이러다 대한민국호(號)가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지역 겨울철 방재 대책은 완전한가

부산의 실내 실탄 사격장에서 지난 주말 오후에 불이나 일본인 관광객 등 10명이 숨지고 6명이 중화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중화상자 일부는 생명이 위독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고는 외국인 관광객이 다수 희생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당국은 사상자에 대한 정중한 사후처리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는 물론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을 통해 이 같은 후진적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화재 역시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경찰과 소방서, 전기안전공사가 이 사격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인지 열흘도 안된 시점에서 참혹한 일이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실제 권총과 실탄이 사용되는 사격장 관리가 총기사고 예방과 방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화재 대비책에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실탄 사격장의 안전소홀과 방재대책 미비가 참사를 불렀다는 일본 언론들의 지적에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광주·전남지역에는 17개의 실내사격장이 있지만 사설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 전남종합사격장을 제외하면 모두가 경찰훈련용이거나 일선학교의 교육용이어서 사설에 비해 안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치더라도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겨울철은 화재에 가장 취약한 계절이다. 따라서 지하시설물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에 대한 방재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실제로 화재나 각종 재난에 취약한 다중시설이 주위에 널려 있는 게 사실이다. 당국은 지역의 겨울철 안전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법조 칼럼

이성범

법대로 해보자? 대화로 해보자!

일상에서 상대방과 분쟁이 있을 때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법대로 해보자"라는 말이 아닐까 한다. 법을 집행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양 당사자가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기보다는 차라리 법에서 정한대로 엄정하게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법 집행이 반드시 어느 한쪽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기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필자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사소한 폭행 고소사건이 벌금형으로 처벌된 뒤 양 집안의 가족들 사이에 명예훼손, 모욕 등 갖은 쌍방 고소를 거듭하여 분쟁이 커지다가 결국 각목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려 중상해를 가한 정도까지 발전된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이웃간의 최초 폭행 사건을 대화로 풀지 못하고 바로 형사 고소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을 보고 그 폭행 고소사건이 "중재를 통한 화해가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낀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소가 이뤄지고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까? 2008년 한 해 동안 수사기관에 접수된 전체 고소사건은 총 44만962건으로 수사기관 전체 사건의 21.4%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위 고소사건 중 17.9%가 '기소'되었을 뿐이고 26.8%가 '혐의 없음', 17.5%가 '공소권 없음', 11.1%가 '각하' 처분되었다.

여기서 '공소권 없음' 처분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주로 이뤄지고, '각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이 명백할 때 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고소사건 중 절반 이상은 당사자 간에 충분히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었을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한 억울함과 분함을 참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일단 고소가 된 뒤에는 상대방이 형사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뒤 법원의 판결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사이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필자로서는 "법대로 해보자"라며 상대방을 고소하기보다는 "대화로 해보자"라고 설득하며 상대방과 함께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보기를 권해보고 싶다.

이제 우리나라도 개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면 이를 감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주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그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권리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기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다짜고짜 법에 호소하여 자신의 권리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과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이를 사회 전반적인 문화로 정착해 간다면 분쟁의 상당수가 해결되어 다른 어떤 선진국이 부럽지 않은 '살맛나는' 나라가 되리라 확신한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기고

부찬희

투자진흥지구 성공하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광주시(이하 광주시) 모든 시민들이 한 마음일 것이다.

문화산업을 통해 도시를 재생시키고, 문화 콘텐츠 생산으로 경제수익을 창출하는 조성사업은 많은 민간자본유입이 필요한 사업이기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민자유치계획을 명문화하고 국가와 광주시의 업무범위를 정해 민자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에서 투자진흥지구 조성은 모두 국가가 주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담당자로서 무엇이 투자진흥지구이며,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를 한 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투자진흥지구란 조성사업의 민간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고자 적용하는 정책수단이다. 이는 조세특례 등 각종 지원을 통해 민자유치를 활성화기 위한 수단으로써 투자진흥지구와 조성사업은 별개의 사안이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 체계상 투자진흥지구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특별법에 규정된 세부추진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조성사업의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종합계획에 광주시의 역할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광주시는 연차별실시계획 수립, 민자유치추진계획 수립 및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특별법 체계상 광주시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지원요청해야만 중앙정부로서 지원 검토가 가능한 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지자체와 국가간의 역할분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에서는 아직까지 민자유치추진계획 및 민자유치본부 설치 등 민자 유치에 따른 제반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조성사업 전체의 민자유치 구도를 확립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앙정부는 각고의 노력 끝에 투자진흥지구 토지매입비 일부를 확보하였으나 광주시의 거부로 동 예산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문화교류의 중심축이자 문화발전소로서 광주시를 세계적인 문화도시의 이름으로 남기기 위한 작업은 오늘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구성원들의 열정과 희망 속에서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한 각종 규제완화와 행정적 지원방안 등을 연구해 왔으며, 내년에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훈령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조성사업의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핵심정책인 투자진흥지구와 투자조합은 근본적으로 광주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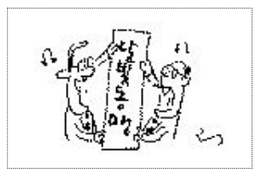
타 특별지구 사례(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서울시 산업진흥지구 등)의 경우, 지정·해제의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고, 신청 및 운영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조성사업 투자진흥지구도 상호 협력 속에서 역할이 분담되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투자진흥지구 조성을 위해서는 '광주시가 해야 하느냐, 국가가 해야 하느냐'라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같이 협력하여 선도적인 민자유치를 통한 문화도시개발의 성공 케이스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개발과 전문위원〉

無等鼓

달빛 동맹



동과 서를 대표하는 내륙도시인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88올림픽고속도로는 지난 1984년 6월 개통됐다. 길이 183.0㎞, 너비 13.2m의 왕복 2차선인 이 도로는 양 도시간 거리를 기존 도로보다 20㎞, 주행시간은 한 시간가량 단축시켰다. 30㎝ 두께의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된 국내 첫 고속도로 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이 도로 덕분에 호남과 영남 간 인적·물적 교류와 소통이 한층 원활해졌다. 정치적 대척점에 서 있었던 양 지역의 대립을 극복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지자체와 사회단체, 언론이 중심이 되어 펼쳤던 영호남 화합 운동이 그것이다. 광주일보와 매일신문은 두 도시의 뉴스와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빛고을큰언덕'을 공동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로 개통의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는 않았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88고속도로 자체의 한계가 컸다. 중앙분리대가 없는 국내 유일의 고속도로로 급경사·급커브가 심해 교통사고 치사율이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3배나 높았다.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도 그 때문이었다.

최근 광주시와 대구시가 잇단 정책공조로 상생의 분위기를 띄워가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동 추진해온 연구·개발(R&D)특구 지정을 비롯 돔야구장 건설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국립과학관 건립 등에서 촘촘한 유대를 과시했다. 내친김에 '야구 월드컵'인 WBC대회까지 함께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한다.

두 도시의 협력관계는 대구의 옛이름인 달구벌과 광주를 상징하는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 '달빛동맹'으로 불린다. 현대판 '나제동맹'이라고도 한다. 동서화합의 새 모델로 자리매김한 양 도시의 연대가 2015년 준공 예정인 88고속도로 확장은 물론 광주~대구간 철도 건설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아파트 건축할때 화재 안전시설 최우선으로

예전에 옆 동에서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어렵게 들어와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서서 최신 장비인 53미터짜리 사다리를 펼쳤다. 구조대원을 싣고 올라갔지만 정작 아파트에는 닿지 못했다. 이런 경우 사람이 불속에서 있는 것을 보면서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이유는 아파트가 넓고 멋진 조경에 신경 쓴 나머지 소방차가 사다리를 펴도 닿지 못하는 구조가 돼버렸기 때문이었다. 이럴 경우 소방관들은 고층까지 걸어 올라가 진화작업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높은 고층빌딩에 묵직한 소방 화재진압장비를 메고 연기와 불의 화기를 뚫고 들어가 사람을 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건축법에는 아파트의 가정마다 별도의 대피시설이 없으면 파괴하기 쉬운 경계벽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다. 위급상황 시 옆집으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요즘 짓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정말 옆집으로 탈출이 쉽지 않다. 최근에 TV 뉴스 고발 프로에서 방송하는 것을 보니 한 아파트의 경계벽면을 건장한 성인 남성이 손도끼로 아무리 때려도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 벽을 깨는 데 4분이 걸렸지만, 만약 어린이들이 벽을 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그 전에 모든 상황은 끝났을 것이다.

그러니 관계기관에서 건축 승인을 내줄 때 반드시 이런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 주기 바란다. ▲이미경·광주시 북구 태령동

여자행세하며 돈 뜯어가는 인터넷 채팅 주의

며칠 전 전주에서 농촌총각과 2년 동안 인터넷 채팅으로 가짜 여성 행세를 하면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자가 경찰에 잡혔다는 것이다. 이 범인은 인터넷에서 여자 모델 사진을 다운받고 여자 ID와 별명으로 접속해서 농촌 총각을 유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총각의 마음을 사로잡은 뒤 아버지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면서 500만 원, 1천만 원씩 빌려쓰는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나이가 차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는 순진한 농촌총각들이 많은데 이런 분한 마음을 누가 헤아려 주겠는가.

이런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인터넷이 농촌에도 다 깔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기는 얼마든지 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 총각분들이 이런 악랄한 수법에 당하시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아무리 호감이 가더라도 섣불리 돈을 보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일로 상처까지 받아 상심의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드리고 싶다.

▲김경자·순천시 안풍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